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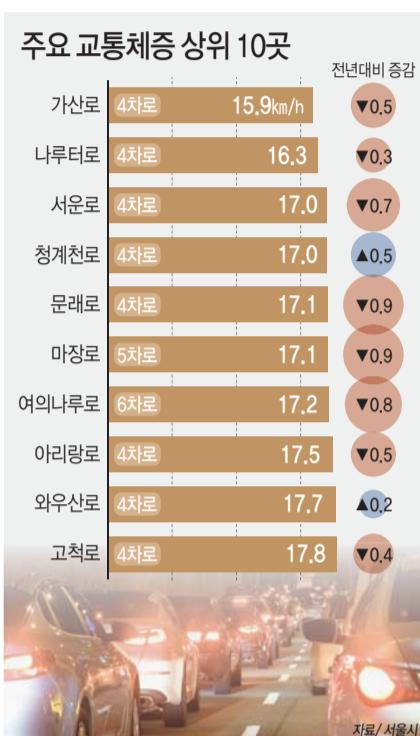


[산업]
국내 완성차 업계
개소세 처방 무색
내년엔 더 암울
05

[마켓·부동산]
“개미는 가라”
부동산 사모펀드
슈퍼리치에 인기
08



서울서 가장 막히는 ‘거북이 도로’는 시속 15km 가산로



평균 '17km/h'로 자전거보다 느려

상업 시설 밀집 지역 도로 속도 ↓
교통체증 도로 작년보다 심해져
서울시, 도로 확장·대안 노선 검토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는 금천구 가산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교통체증 도로로 이름을 옮긴 10개 구역 중 8곳이 전년보다 속도가 줄어 교통 혼잡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천구 가산로(관악검도관~공단오거리)의 차량 평균 속도는 15.9km/h로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구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로 연장 500m 이상,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평균 차량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카드 택시 7만 대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

가산로(관악검도관~공단오거리)는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버스정차로 인한 차로 차단으로 차량 통행속도가 가장 느렸다. 가산로의 차량 평균 속도는 2016년 시속 16.4km에서 지난해 0.5km/h만큼 더 떨어진 15.9km/h를 기록했다.

가산로에 이어 나루터로(신사역 ~ 신동초교) 16.3km/h, 서운로(제일약품 ~ 외교박물관) 17km/h, 청계천로(동아일보로터리 ~ 신답철교앞) 17km/h, 문래로(제일종합카센터 ~ 경방필백화점) 17.1km/h 등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도로로 이름을 옮겼다.

차량 통행속도 하위 10개 구역에 포함

된 도로 중 속도가 개선된 곳은 청계천로와 와우산로뿐이었다. 나머지 도로들은 최대 0.9km/h까지 속도가 떨어졌다.

안호영 의원은 “교통혼잡이 심한 구역의 평균 차량 속도는 17km/h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 초보자가 평지를 달리는 20km/h보다 낮은 속도”라며 “서울시는 개선책을 마련해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체증 1위 구역에 대안 도로를 만들거나 도로 확장을 해도 교통체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교통량이 늘어나서 건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수요관리를 통해 차들의 진입을 막거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 방향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체증이 일어나거나 지역 주민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도로 확장이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2017년 서울 차량 통행속도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거나 공사, 집회, 행진 등이 많은 도로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로에 이어 답답한 도로 2위를 기록한 나루터로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대체 지점으로 차량 통행 속도가 16.3km/h로 느렸다. 서운로는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 평균 속도가 17km/h로 낮았다. 문래로는 영등포로 우회로와 주거·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평균 차량 속도가 시속 17.1km로 느려 차량이 막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법 개정 추진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 이어져
현황파악해 특별 관리 할 것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KT 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연장 3만2147km에 이른다.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신규 지하시설물과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연 1회) 매설 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시는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 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열수송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 안전 조치를 확대한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동구만 2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는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다. 지하 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 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 장치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구가 법정 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매뉴얼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므로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시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주요 통신 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자치구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가짜 한우’ 판매한 21개 업소 적발

서울시, ‘미스터리쇼퍼’ 통해 단속

가짜 한우를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 판매업소 893곳을 점검,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21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자다. 해당 제품이 한우

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 합동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11월까지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 점검 결과 21곳의 불법판매 업소가 적발됐다.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노린 불법 판매 행위였다.

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소를 고발 처리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 표시한 12곳은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조치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위반업소는 2.4%

(893개소 중 21곳)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806개소 중 31곳)와 비교해 1.4%포인트 줄었다”며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취업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1037곳 중 102개소)로 지난해 11.6%(983개소 중 114곳)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 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한우 둔갑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우협회와 협치·점검을 실시한다.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눈 맞는 아이들

/연합뉴스

경기도, 안전관리 소홀 다중이용시설 적발

소방시설 불시단속… 11건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



경기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발했다. 용인시 소재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하남시 D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방재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 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김승열 기자 kimsy@